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21호 관련)

2021. 11. 1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30~18:4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21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개 인정을 하지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경감을 해달라는 것이 주내용인 것 같아서 과태료 경감 부분에 대해 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설명서는 교부를 했는데 설명확인 의무를 안 한 2건에 대해 사후에 보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건은 2일 후에 보완을 했고 1건은 14일 후에 보완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확인 시한이라는 것이 없어서 유권해석으로 상당기간 내에 확인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 상당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임. 5영업일이냐 아니면 5일이나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고 계신 두 건의 사후보완 중 상당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1건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 (진술인) 말씀한 것처럼 1건은 저희들이 2~3일 안에 보완을 했고, 1건은 상당한 후에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러면 2건 중에 상당기간 안에 확인한 것은 1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음. 설명확인 의무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는 동일상품 재가입건에 대한 질문임. 논리적으로 봐도 상품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재가입한 것은 설명확인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음. 이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요청하고 계신 것인지?

- ▶ (진술인) 동일상품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음. 동 상품은 직전에도 고객분들께서 동일한 내용의 상품에 가입하셨는데 그때 당시 가입을 하실 때는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음’ 부분을 표기(check)해 주신 것이 확인됐음. 그런데 동일상품을 그다음에 다시 판매하고 설명할 때 동일상품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가입하셨던 고객한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일부러 설명을 확인받지 아니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단순히 서류상 미비로 확인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음. 이 부분은 고의에 의해서 설명확인이 누락됐다고 보다는 이전에 동일상품에 가입했을 그때 당시에 설명이 다 이루어졌고 그때 설명확인 절차도 다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은 단순 서류 누락으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임.
- (위원)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위반 관련된 질문임. 제가 이전에 회의할 때 위반결과 ‘중대’로 판단된 39건에 대해서 쪽 보면 발송일자, 소위 말해서 ‘시간의 근접성’, 그리고 수신인이 거의 동일한 ‘행위의 동일성’이 보이는 것이 몇 개가 있음. 제가 볼 때 (주)우리은행의 과태료 경감에 있어서 이 부

분이 가장 중대한(critical) 것 같은데, 위반결과 ‘중대’로 되어 있는 내역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임. 저희들이 보는 것이 시간, 그리고 펀드의 회차, 동일한 회차냐, 그리고 수신인이 동일했느냐를 보고 있음. 그래서 정말 동일한(identical) 것이면 중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완전히 동일하지(identical) 않더라도, 예를 들어 1건은 3명이고 1건은 2명이면, 2명이 3명에 다 포함되는 경우는 중복 투자 광고 행위의 단일성으로 간주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위반 관련된 내용들을 정치(精緻)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음.

▶ (진술인) 알겠음.

- (위원) 설명서 교부와 관련해서 지적된 건이 총 25건인데 그 중에 3건이 실제 설명서를 수령 또는 수령 거절하였다는 고객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음. 이 3건을 금감원에 제출을 했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이런 설명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검사국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의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준적도 있었고, 제재심에서 의견진술 등 은행이 상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출을 안하고 왜 지금 제출하는 것인지?

- ▶ (진술인) 진작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검사에서 지적된 이후라는 이유로 검사국에서 받아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진작부터 드렸던 것인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증선위 기회에 위원님들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 것임.
- (위원) 그것은 나중에 금감원에 확인하도록 하겠음. 투자광고 관련해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39건, 직원 수로 봤을 때는 22명이고 그중에 16명이 문자메시지를 1번 발송했다, 개인의 일탈행위다, 그래서 위반행위 동기 '중' 또는 '하'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스템 활용을 왜 안 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송한 행위가 왜 생겼는지?
- ▶ (진술인) 은행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이 SMS문자 발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승인된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발송되도록 제어가 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점에서 판매인들이 그 문구 이외에 안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참여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설명서교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3건의 확인서는 언제 제출하셨는지, 왜 이렇게 늦게 제출 하셨는가를 질문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는 제재심 단계부터 이미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음. 그런데 지난번에 변론하면서는 시간에 쫓기고 고객에게 부탁하기 어려워서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즉, 늦게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

으셨는지?

- ▶ (진술인) 지난번 저희 설명 드렸던 부분은 제출 시기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지적대상 전체 25건에 대해서 은행 자체의 책임을 경감하고 인정받는 목적으로는 모든 고객 전원에게 이런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좋겠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은행에서도 상당히 고객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실제로 이런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들이 직접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부탁을 해서 사후에 이런 추가서류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고객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은행의 책임 경감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요청 자체가 해당 영업점 직원들로서는 쉽지 않아서 관련 서류를 3건 외에 더 많이 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 드렸던 것임.

○ (참여자) 검사 종료 후에 제출하신 것이 맞는지?

- ▶ (진술인) 그러함.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행의 과태료 감경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난처했기 때문에 즉시 신속하게 많은 분들한테 받아서 제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음. 금감원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청구한 날짜와 금감원에 제시한 날짜를 특정해서 다음 회의에는 명확하게 밝혀서 말씀드리겠음.

-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투자광고의 개별성 판단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각각 회차라든지, 광고 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고객들의 동일성 부분을 건별로 전부 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없어서 일부 광고에 있어서는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하게 근거를 붙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알겠음.

- (위원)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와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바가 ○○○ 직원이 7건 권유를 하셨는데 판매일까지 동일한 4건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위반행위가 1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백번 양보해서 보수적으로 본다하더라도 최소한 동일 시기에 발송된 것은 1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 (위원) 이중에 4건이 고객이 같은 분인지?

▶ (진술인) 아님. 권유판매자는 같지만 고객은 다름.

- (위원)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소비자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공 급자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모든 규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가 당연히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 함. 다만, 이 건 제재에 있어서 과태료라는 행정제재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이 정해 놓은 절차를 미리 시스템을 잘 갖추어 두고 그야말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잘 관리하라는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인 결함에 의해서 동일한 행위가 같은 날 다수 일어난 결과가 초래되었음. 그래서 과연 과태료를 행정제재 관점에서 부과할 때는 투자자보호도 필요하지만, 어떤 행위의 규범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1건의 행위로 봐서 규제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저는 대리인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데 투자광고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직원이 동일한 날짜에 한 10여명의 사람들한테 각각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내서 광고를 하면 그 위반은 제가 생각할 때 1건임. 왜냐하면 열 사람을 한꺼번에 메일 리스트에 넣어서 보낸 것과 동일하기 때문임. 그런데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 권유는 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있는 규제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소비자입장에서 위반이 몇 번 일어났느냐, 소비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같은 날 열 사람한테 무자격자가 투자 권유를 했으면 그것은 소비자기준으로 보면 10건의 위반이라고 생각함. 제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firm)한데 지금 아니라고 말

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한 반론을 다음에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알겠습니다.

- (위원)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를 보면 9건에 일반투자자는 8인임. 그러면 한 사람이 2번을 받은 것인지? 예를 들어 ○○○씨가 ‘☆☆☆금융센터 ※※※※※※ 신탁’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투자권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다 다른 사람들인 것인지?

▶ (진술인) 다른 사람들임.

- (위원) 그러면 이중에 한 사람은 두 판매자한테 동일한 내용을 받은 것인지? 위반건수는 9건인데, 해당 투자자는 8인임.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반투자자의 수가 위반 건수보다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위반건수는 9건이고 투자자는 8인임.

▶ (진술인)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9건 중에 1건은 설명확인 의무 위반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둘 중에 큰 것에 대해 적용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설명확인 의무와 설명서교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설명확인 의무와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 권유도 둘 중에 높은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 (진술인)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상상적 경합, 실제적 경합에서 숫자를 몇 개로 평가하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제재 규정에서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이 명확해서 저희 건의 경우가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듬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참여자) 설명서를 교부 받았다는 고객확인서를 추후에 제출했는데, 고객들이 그 확인서를 제출해 준 것 자체를 은행에서 조작한 것은 아닌지?

- (보고자) 저희가 검사과정에서 일단은 자필로 서명한지 여부와 뒤에 주민등록증까지 첨부해서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확인했다고 봄.

○ (참여자)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자격 없는 사람이 보낸 것 중에 8명에 대해 광고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보고자) 고객이 8명인 이유는 1명의 고객이 2번 가입했기 때문임. 서로 다른 날짜에 가입을 한 것이고 판매직원은 동일함.

○ (참여자) 그 판매직원이 ○○○씨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2번 가입한 시차는 얼마인지?

- (보고자) 7월 20일과 8월 29일임.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